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자녀수별 금리우대”

신혼부부 소득 제한 7000만원 ‘상향 조정’...한도 2.2억으로 확대
 2자녀 ↑ 2.4억...1~2자녀 0.2~0.3%p · 3자녀 ↑ 0.5%p 우대금리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5000만원 · 연 1.8~2.7% 금리 제공

#1.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했다. A씨는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 이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었으나 2억6000만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급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다.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9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준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는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말로만 신혼부부 위한 주택대출?...비현실적 소득기준 논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디딤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는 2억20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거주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것이 대부분이라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30대 중후반 이후 결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정책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신혼부부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신혼부부·유(有)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지역 거주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것이 대부분이라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30대 중후반 이후 결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정책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결혼 1년차인 정모(39)씨는 “부부가 둘다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전세자금만 모아 어렵게 결혼했다”며 “조만간 서울에서 집을 살 예정인데 은행 대출금리가 비싸 디딤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7000만원이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디딤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연 7000만원)은 역시 소득기준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약가능 소득기준에도 못미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월 650만원), 홑벌이 부부는 120%(600만원) 이하로 그나마 맞벌이에게는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연소득 7800만원(올해 기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younXXXX 라는 아이

디의 네티즌은 “요즘 결혼이 늦어 다들 5년 이상 맞벌이하고 결혼하는데 소득이 7000만원? 게다가 세전 소득 기준인데 대체 누가 정부 정책 혜택을 받나”고 비판했다.

thesXXX라는 네티즌은 “강남에 사는 부모를 둔 금수저 부부는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고 아내가 작은 가게를 취미로 운영하면서 연소득 3000만원도 안 나오는데 외제차를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하지 1년 넘은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맨날 신혼부부정책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요즘 신혼부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주변 지인들중 혜택 받은 신혼부부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그렇다. 요즘 돈이 없어 결혼도 늦게하는데 경력상 연봉이 지금 기준엔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는 진짜 신혼부부들에 맞춰 정책을 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신혼부부 지원을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디딤대출건수는 지난해 9만4000여건에서 올해는 10만가구로 불과 6000여건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저출산 극복과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주거여건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정책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상향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돼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대출 예산 수요는 10조 이상”이라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신혼부부 대출은 그렇지 않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소득기준을 상향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토부, 맞벌이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 다녀도 기준 상회...“신혼부부 아닌 저소득 정책”
 국토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소득기준 상향 쉽지 않아”

끌고 다닌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3년만 다녀도 부부합산 7000만원은 넘을 것”이라며 정부의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미칠 것을 경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혼부부 정책과 저소득자 정책은 분리해야 한다’거나 ‘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적했다.

이어 “지금같은 대책들은 신혼부부 지원책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책이 맞다고 본다”며 “이렇다면 이름에 신혼부부를 붙이지 말라. 신혼부부 지원이라고 쓰려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한단계 한단계 진급하고 연봉 올리느라 눈치보고 고생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